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정의당 “법 후퇴” 반발

산재 사망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50인 미만 3년 유예·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전국 80%”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 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반면에

초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날 11일 정의당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말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입장이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규정 역시 대표이사 아닌 안전담당 이사 등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책임을 돌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다면 도급의 형태에 포섭돼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의당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만난 김종인 “앞으로 만날 일 없다”

安, 국민의힘 입당 부정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복수의 국민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대표가 어제 김 위원장을 찾아가 독대했다”고 밝혔다. 둘은 국회 밖 모처에서 오후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만 하러 가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응낙해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나를 만났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 대표를) 만날 일 없다”며 “만나고 하면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요청도 안 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안 대표는 이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만날 일 없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안 대표는) 우리 당에 와서 경선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가 먼저 단일화 얘기를 했고, 우리도 후보를 단일화해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유튜브 종편 ‘텔리민주’ 개국

보도·교양·예능 콘텐츠 제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유튜브 채널 ‘썸TV’를 온라인 종합편성방송(종편)인 ‘텔리민주’로 확대 개편한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일 오전 9시 ‘텔리민주’를 정식 개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국 하루 전인 이날 아나운서 대표, 김태연 원내대표가 출연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음료 광고를, 김 원내대표는 영화 ‘기생충’의 장면을 각각 패러디했다. ‘텔리민주’는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통 혁신을 위한 6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

다. 그동안 현안 대응용 긴급 라이브, 선거용 기획물에 치중했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다변화, 보도·교양·예능 분야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작해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도 부문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서 ‘팩트 체크’ 코너를 정례화했다. 고민정 의원이 주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차 재난지원금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텔리민주’는 민주당의 역사 등을 정리하는 교양 분야, 공개회의의 주요 발언의 내막을 파헤치는 예능 분야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론 활활... 68% “찬성”

리얼미터 조사...정부 ‘재정 악화 부담’ 여론 추이 관망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방식,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작년 4·15 총선서 재미를 본 추억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지만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적극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1%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재원은 국채를 찍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여론이 밀어붙일 경우 타이밍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초기에 진정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질 경우엔 본격적 백신 접종과 맞물리는 6월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원이나 코로나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강하게 요구할 경우 코로나 상황이냐 여론을 보가면서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흉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어려움이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정부로서는 늘어나는 부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빚은 1년 새 100조 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포인트나 치솟았다. 올해도 슈퍼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 1차 때 편성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설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올려야”

해양·농림부 장관 건의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7일 건의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두 장관은 상한액 상향 이유로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동구 대인동, 싼 땅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가능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당사는 내재산이라든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